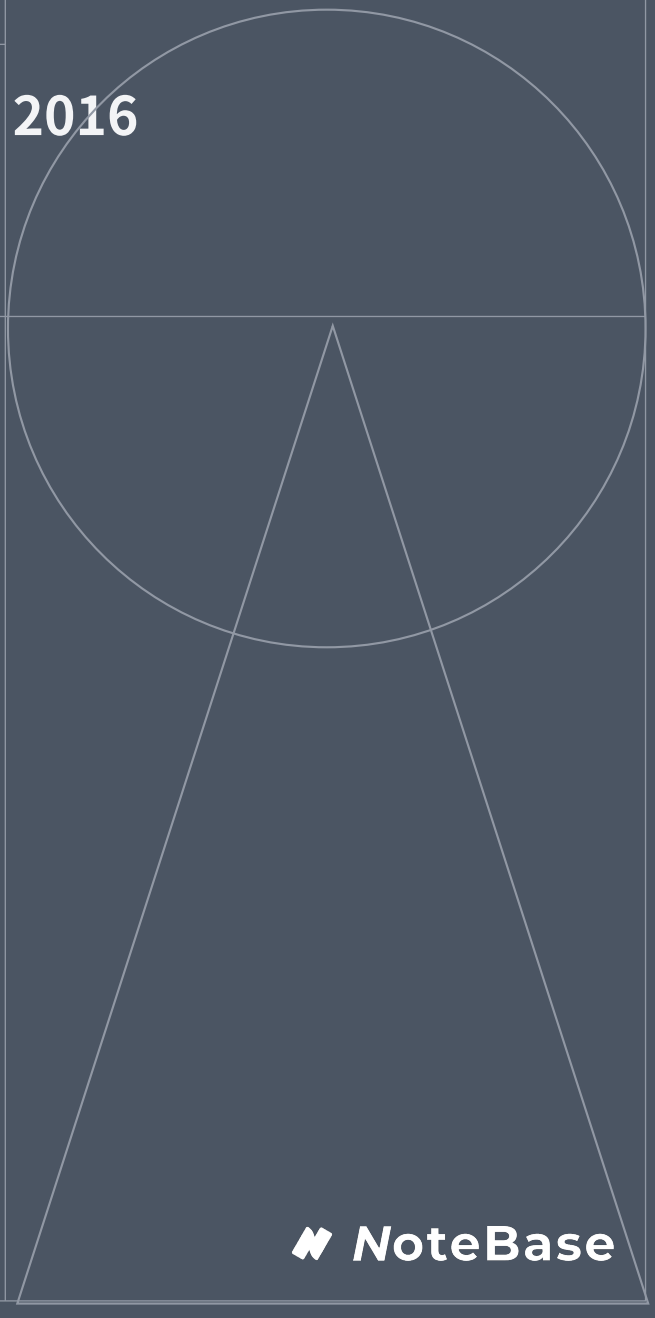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사회 · 201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사회 · 2016

공무원/국가직/9급 · 사회 · 2016

문 1. 다음은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A와 B는 각각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중 하나이다.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교 결과	비교 기준
A > B	네트워크형 조직의 발달
A > B	(가)
A > B	(나)
A < B	(다)
A < B	(라)

① (가) - 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

② (나) - 다품종 소량생산의 비중

③ (다) -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

④ (라) -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의 분리 정도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표에서 A는 정보사회, B는 산업사회이다. 정보사회에서는 전산화와 수평적 의사소통으로 **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이 작아지므로**, (가)에 이 기준을 넣으면 표의 A > B와 반대인 A < B가 되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표의 첫 번째 비교 기준인 '네트워크형 조직의 발달'은 산업사회보다 정보사회에서 두드러진다. 이 기준에서 A > B이므로 A는 정보사회, B는 산업사회이다. 각 선지는 해당 기준으로 두 사회를 비교했을 때 표의 부등호와 일치하는지 판단한다.

① X: 중간 관리층은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업무를 조정한다. 산업사회의 위계적 조직에서는 이러한 역할이 크지만, 정보사회에서는 정보 통신 기술로 구성원들이 직접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따라서 이 기준의 비교 결과는 A < B이므로, A > B인 (가)에 넣을 수 없다.

② O: 산업사회에서는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만드는 소품종 대량생산이 중심이다. 정보사회에서는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맞추어 생산 방식을 유연하게 바꾸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비중이 커진다**. 따라서 A > B인 (나)에 들어갈 수 있다.

③ O: 산업사회에서는 공장과 사무실이 주된 일터가 되어 가정과 일터가 뚜렷하게 분리된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재택근무 등이 가능해져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낮아진다**. 따라서 A < B인 (다)에 들어갈 수 있다.

④ O: 산업사회에서는 신문·방송 등 소수의 정보 생산자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경향이 강하다. 정보사회에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도 정보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하므로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약해진다**. 따라서 두 집단의 분리 정도는 A < B이므로 (라)에 들어갈 수 있다.

NoteBase

문 2.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최근 소비자들의 쇼핑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해외 직접구매로 인한 대금 결제 후 배송사기, 신용정보 해외유출 등의 새로운 문제점도 증가하고 있다.

<보기>
ㄱ.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강제적 문화접변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ㄴ. 문화의 간접전파로 인해 문화변동이 일어난다.
ㄷ. 문화지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ㄹ. 아노미 현상과 문화복고 현상을 증가시킨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인터넷을 매개로 외국의 상품과 소비 방식이 전해지는 것은 **간접전파**에 해당한다. 새로운 거래 기술에 소비자 보호 제도와 규범이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문제는 **문화지체**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X: 강제적 문화접변은 지배나 강압에 의해 다른 사회의 문화가 유입되어 기존 문화가 변하는 현상이다. 제시문에서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외국 상품을 스스로 구매하므로, **강제적 수용이 아니라 자발적 수용**으로 보아야 한다.

ㄴ. O: 간접전파는 인터넷이나 방송 같은 **매체를 통해 다른 사회의 문화가 전해지는 것**이다. 인터넷 해외 직접구매로 외국의 상품과 소비 방식이 전해지고 소비자의 쇼핑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간접전파에 따른 문화변동이다. 여기서 '직접구매'는 구매 방식에 관한 말이며, 문화가 전달되는 통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이다.

ㄷ. O: 문화지체는 기술 등 물질문화의 변화 속도를 제도·규범 등 비물질문화의 변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부조화이다. 해외 직접구매 기술과 거래 방식의 확산에 비해 소비자 보호나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규범의 정비가 뒤처지면 배송사기와 정보유출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기술 변화에 맞게 제도와 규범을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ㄹ. X: 아노미는 사회 규범의 부재나 혼란으로 행동의 기준이 약해진 상태이고, 문화복고는 과거의 문화로 돌아가려는 현상이다. 제시문에는 전통문화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없으며, 배송사기와 정보유출이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 사회 규범 전반의 부재나 혼란이 심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제시된 문제는 **새로운 기술과 제도·규범 사이의 변화 속도 차이**에 주목하여 문화지체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옳은 보기는 ㄴ과 ㄷ이며, 이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3. A ~ D는 자료수집 방법 중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참여관찰법 중 하나를 가리킨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징 / 자료 수집 방법	시간·비용의 효율성	자료 수집 도구의 구조화 정도	주관의 개입 가능성
A	높음	높음	낮음
B	낮음	높음	낮음
C	낮음	아주 낮음	높음
D	낮음	낮음	높음

① A는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 동일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기에 유리하다.

② B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C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으면서 폭넓은 연구가 가능하다.

④ D는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소수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C는 조사 대상 집단의 생활에 직접 참여하며 관찰하는 **참여관찰법**이다. 현장에 머물며 자료를 수집해야 하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크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A는 시간·비용의 효율성과 도구의 구조화 정도가 높고 주관의 개입 가능성이 낮으므로 질문지법이다. 미리 정한 **동일한 질문과 응답 형식**을 여러 사람에게 적용하므로,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하기에 유리하다.

② O: B는 도구의 구조화 정도가 높고 주관의 개입 가능성이 낮지만 시간·비용의 효율성은 낮으므로 실험법이다. 실험법은 다른 조건을 통제하고 독립 변인을 조작하여 종속 변인의 변화를 살핀다. 이 과정에서 **실험 처치로 인한 피해나 연구 목적의 은폐** 등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③ X: C는 도구의 구조화 정도가 아주 낮고 주관의 개입 가능성이 높으므로 참여관찰법이다. 연구자가 조사 대상 집단의 생활에 직접 참여하여 행동과 상호 작용을 관찰하므로, 현장에 접근하고 오랜 시간 머무르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든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는다'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D는 도구의 구조화 정도가 낮고 주관의 개입 가능성이 높으며, C보다 도구의 구조화 정도가 높으므로 면접법이다. 조사자와 응답자가 대화하면서 답변에 따라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어 **생각과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 적합하다. 한 사람을 조사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수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NoteBase

문 4. 다음은 결합의지와 접촉방식을 기준으로 사회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결합의지 / 접촉방식	본질적, 자연적	선택적, 합리적
몰인격적, 형식적	A	B
전인격적, 직접적	C	D

<보기>

ㄱ. A는 B에 비해 형식화된 규약에 의한 공식적 통제가 잘 이루어진다.

ㄴ. 가족, 친족, 민족은 B에 해당된다.

ㄷ. C는 D에 비해 가입과 탈퇴가 어렵다.

ㄹ. 회사 내 동호회는 B와 D의 성격이 공존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C는 자연적으로 맺어진 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자발적으로 결성된 D보다 **가입과 탈퇴가 어렵다**. 회사 내 동호회에는 회사라는 2차 집단을 바탕으로 하는 성격과 구성원끼리 친밀하게 교류하는 **1차 집단의 성격**이 함께 나타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표의 결합의지에서 '본질적, 자연적'은 공동 사회, '선택적, 합리적'은 이익 사회를 뜻한다. 접촉방식에서 '몰인격적, 형식적'은 2차 집단, '전인격적, 직접적'은 1차 집단의 특징이다. 따라서 A는 공동 사회이면서 2차 집단, B는 이익 사회이면서 2차 집단, C는 공동 사회이면서 1차 집단, D는 이익 사회이면서 1차 집단이다.

ㄱ. X: A와 B는 모두 접촉방식상 2차 집단이지만 결합의지가 다르다. 공동 사회인 A는 자연적 유대와 관습을 중시하고, 이익 사회인 B는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합리적으로 결성된다. 따라서 형식화된 규약에 의한 공식적 통제가 더 잘 이루어지는 것은 **A가 아니라 B**이다.

ㄴ. X: 가족, 친족, 민족은 모두 자연적 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 사회**이므로 이익 사회인 B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족과 친족은 친밀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중심이므로 C에, 민족은 구성원 전체가 직접 접촉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는 집단이 아니므로 A에 해당한다.

ㄷ. O: C는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공동 사회로, 가족이나 친족처럼 구성원 자격을 개인의 선택만으로 얻거나 버리기 어렵다. 반면 D는 동호회처럼 특정 목적이나 관심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결성된 이익 사회이다. 따라서 **C가 D보다 가입과 탈퇴가 어렵다**.

ㄹ. O: 회사 내 동호회는 공통의 취미나 관심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되므로 이익 사회의 성격을 지닌다. 회사라는 2차 집단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구성원끼리 친밀하고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1차 집단의 성격도 함께 지닌다**. 따라서 이익 사회이자 2차 집단인 B와 이익 사회이자 1차 집단인 D의 성격이 공존한다.

옳은 보기는 ㄷ과 ㄹ이며, 이 조합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③이다.

NoteBase

문 5. 다음은 A국의 빈곤율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의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단위 : %)

구분 \ 연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절대적 빈곤율	7.2	7.0	6.8	6.5
상대적 빈곤율	6.9	7.0	10.2	11.6

* 절대적 빈곤율 : 전체 가구 중 가구 소득이 ㉠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상대적 빈곤율 : 전체 가구 중 가구 소득이 ㉡ 중위소득의 50 % 미만인 가구의 비율

① ㉡은 전체 가구 소득의 평균값이다.

② 2005년에는 ㉠과 ㉡의 값이 같다.

③ 절대적 빈곤가구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④ 2000년에는 상대적 빈곤가구가 모두 절대적 빈곤가구에 포함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2000년에는 상대적 빈곤율이 6.9%로 절대적 빈곤율 7.2%보다 낮다. 두 기준 모두 일정 소득 미만인 가구를 가려내므로,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낮아** 상대적 빈곤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가구에 포함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은 **중위소득**이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이며, 소득 총액을 가구 수로 나눈 평균소득과 구별된다. 자료에서 상대적 빈곤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50%이다.

② X: 2005년에는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7.0%이지만, 이는 **빈곤가구의 비율이 같다**는 뜻이다. 빈곤을 판단하는 기준 금액인 ㉠ 최저생계비와 ㉡ 중위소득이 같다는 뜻은 아니다. 상대적 빈곤선은 ㉡ 자체가 아니라 ㉡의 50%이며, 두 빈곤율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과 ㉡의 값이 같은지 알 수 없다.

③ X: 절대적 빈곤율은 7.2%, 7.0%, 6.8%, 6.5%로 낮아지지만, 이는 전체 가구 중 절대적 빈곤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감소**이다. 절대적 빈곤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전체 가구 수의 변화가 제시되지 않은 자료만으로 빈곤가구 수가 감소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④ O: 2000년에는 절대적 빈곤율이 7.2%, 상대적 빈곤율이 6.9%이다. 두 빈곤율은 같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최저생계비 미만,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상대적 빈곤율이 더 낮으므로 **중위소득의 50%가 최저생계비보다 낮다**. 따라서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는 모두 최저생계비 미만이기도 하므로, 상대적 빈곤가구 전체가 절대적 빈곤가구에 포함된다.

NoteBase

문 6. 다음 글의 ㉠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민법」 상 태아는 원칙적으로 (㉠)이/가 없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상속 등과 같은 경우 태아의 (㉠)을/를 인정하고 있다.

① 미성년자는 (㉠)이/가 있다.

② 자연인만 (㉠)을/를 가질 수 있다.

③ 출생신고를 마쳐야만 (㉠)을/를 취득할 수 있다.

④ 제한능력자 제도는 (㉠)이/가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권리능력**이다. 미성년자도 출생한 사람이므로 권리능력이 있으며, 제한되는 것은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다.

선지별 해설

㉠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권리능력이다. 태아에게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속순위 등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보호한다(제762조, 제1000조 제3항).

① O: 미성년자도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권리능력이 있다**.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제한된다는 것과 구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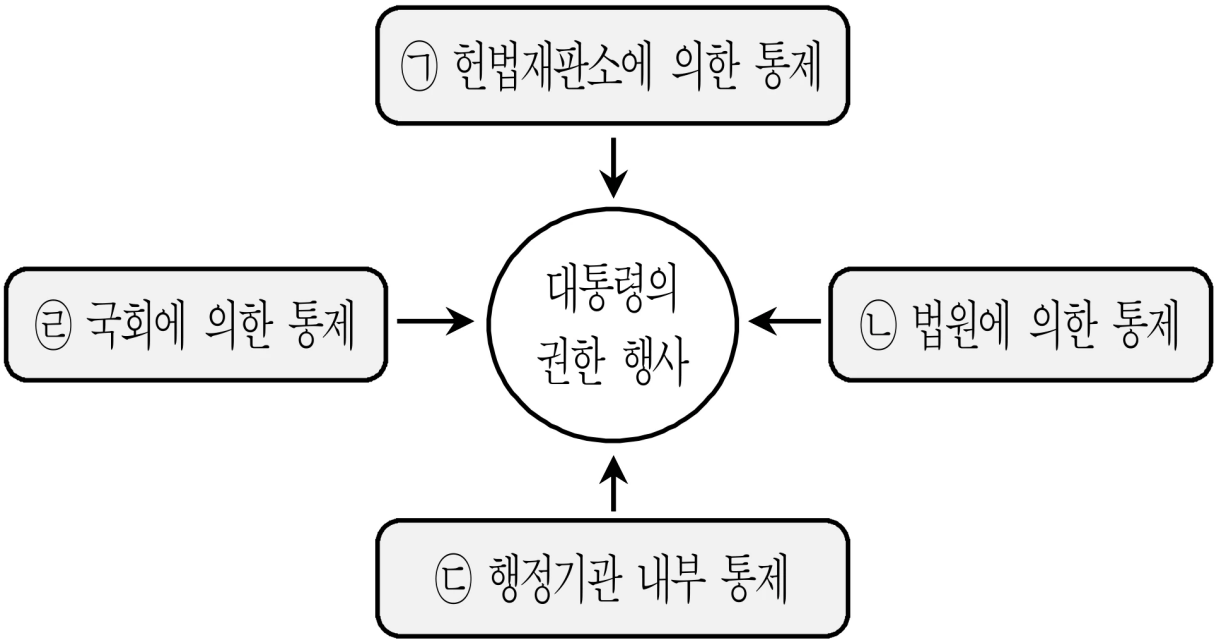
② X: 권리능력은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에도** 인정된다. 자연인은 사람을 뜻하고, 법인은 법률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되는 단체나 재산의 조직을 뜻한다. 민법 제34조에 따라 법인도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③ X: 자연인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사망할 때까지 이를 가진다(민법 제3조). 출생신고는 출생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신고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이미 출생한 사람은 권리능력이 있다.

④ X: 제한능력자 제도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행위능력은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하여 불리한 거래로부터 보호한다(민법 제5조).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권리능력은 인정된다.

NoteBase

문 7. 그림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수단을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 -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 -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 -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④ ㉣ -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기관은 **국회**이고,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소추한 사건을 **심판**한다. ㉠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담당 기관을 혼동한 설명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이다.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기관은 국회**이다(헌법 제65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소추한 사건에 대해 탄핵심판을 담당한다(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를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은 법원에 의한 통제이다.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 즉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판단 사항이 되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헌법 제107조 제2항). 대통령이 발한 명령도 이러한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

③ O: ㉢은 행정기관 내부 통제이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헌법 제88조 제1항).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에서 정책을 검토하므로, **행정부 내부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④ O: ㉣은 국회에 의한 통제이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헌법 제63조 제1항). 이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여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것으로, 국회가 국무총리를 직접 해임하는 것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8.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달리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일반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② 법의 일반원칙은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을 말하며,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그 예이다.

③ 국제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등이 그 예이다.

④ 조약은 2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 형식의 합의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④의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원칙은 국가들이 별도의 조약을 체결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법규범이 아니다. 국제관습법은 일반적 관행과 그 관행을 법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에, 법의 일반원칙은 여러 국가가 공통으로 승인하는 보편적 법 원칙에 근거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따라서 조약과 같은 **별도의 체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② O: 법의 일반원칙은 여러 국가의 법체계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보편적 법 원칙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형식상 권리 행사라도 그 권리의 목적과 한계를 벗어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국제법에서도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다**.

③ O: 국제관습법이 성립하려면 국가들의 반복적이고 일반적인 관행뿐 아니라, 그 관행을 법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여기는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단순히 오래 반복된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제관습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는 이러한 국제관습법의 예이며, 관련 내용이 조약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관습법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질 수 있다.

④ X: 조약은 둘 이상의 국가가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맺는 문서 형식의 합의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비준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를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9.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개념에 대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달리, 우리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특수 불법행위의 유형을 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①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주의를 게을리한 사이 개가 행인을 물어 상처가 난 경우, 개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② 칵테일 가게 종업원이 칵테일 제조 묘기를 하던 중 잘못 던진 컵에 손님이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③ 타인의 승용차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해 상품 진열대를 파손하여 운전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④ 5세 자녀가 타인의 집 유리창을 부주의로 파손한 경우, 그 자녀의 부모가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운전자 자신이 부주의로 진열대를 파손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일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 본인의 배상책임이 특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일반 불법행위는 가해자 본인의 고의·과실에 따른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한다. 특수 불법행위는 동물의 가해나 종업원·책임무능력자의 가해처럼 민법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이다.

① O: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그 동물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점유자가 부담하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다(민법 제759조). 개의 점유자가 산책 중 주의를 게을리하여 개가 행인을 물었으므로 이 책임의 사례에 해당한다.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으나, 이 사례에서는 주의를 게을리하였다.

② O: 종업원이 업무 수행 중 손님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용자 책임**이다(민법 제756조). 칵테일 제조 묘기는 가게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는 것은 특수 불법행위의 사례이다. 다만 사용자가 종업원의 선임과 업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③ X: 운전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타인의 진열대를 파손하고 직접 배상하는 것은 **자기 행위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다(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자동차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만으로 특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시문의 사례로 분류할 수 없다.

④ O: 책임능력이 없는 자녀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부모가 부담하는 **감독자 책임**이다(민법 제753조·제755조). 책임능력은 자기 행위에 따르는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사례의 5세 자녀는 이러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며, 자녀가 파손한 유리창의 손해를 법정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배상하는 것은 특수 불법행위의 사례이다. 다만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NoteBase

문 10. 밑줄 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찰서장은 긴급범죄신고 번호인 112에 허위 신고를 하여 근무 중인 경찰들을 긴급 출동케 한 갑(甲)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경찰은 긴급범죄신고 112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하게 대처해 112 긴급범죄신고가 국민의 비상벨 역할을 제대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 검찰청에 청구한다.

②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금고가 부과되는 가벼운 범죄사건에 활용된다.

③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의 불출석 심판청구를 법원이 허가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즉결심판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불출석 심판청구를 허가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즉결심판은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심판하기 위한 절차이다. 경찰서장이 청구하더라도 형을 선고하는 주체는 법원의 판사이다.

① X: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 **관할법원에 청구**한다. 선지의 '검찰청에 청구한다'를 '관할법원에 청구한다'로 고쳐야 한다. 심판은 법원의 판사가 담당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제3조제1항).

② X: 즉결심판으로 부과할 수 있는 형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다. '금고'는 이 절차에서 선고할 수 있는 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지의 형벌 범위를 위와 같이 고쳐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③ X: 형을 집행하는 주체가 경찰서장이라는 부분은 맞지만, 집행결과의 보고 대상이 잘못되었다. 경찰서장은 그 집행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판사는 심판을 담당하고, 검사는 형의 집행결과를 보고받는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8조제1항).

④ O: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을 열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불출석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 출석 원칙에 대한 예외이며, 불출석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 제8조의2제2항).

NoteBase

문 11. 사회계약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홉스(T. Hobbes)는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였다.

② 로크(J. Locke)는 국가가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국민들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③ 로크(J. Locke)는 정치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분립시키는 삼권분립론을 주장하였다.

④ 루소(J.J. Rousseau)는 국민들이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어도 국가에 자신들의 주권을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입법권·집행권·사법권을 나누는 삼권분립론은 **몽테스키외**의 주장이다. 로크는 입법권·집행권·연합권을 구분하고, 특히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강조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 사이의 충돌로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보았다. 이를 벗어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려면 **강력하고 분할되지 않는 주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였다.

② O: 로크는 생명·자유·재산과 같은 개인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정부의 권력은 국민이 맡긴 것이므로, 정부가 권리를 침해하고 신탁을 저버리면 국민은 **저항하여 정부를 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③ X: 입법권·집행권·사법권을 분리하여 권력 남용을 막으려는 삼권분립론은 **몽테스키외**의 주장이다. 로크는 정치권력을 입법권·집행권·연합권으로 구분하고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강조하였다. 연합권은 외교·전쟁·강화 등 대외 업무에 관한 권한이며, 로크는 이를 집행권과 함께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로크의 권력 구분에서 사법권을 독립된 세 번째 권력으로 제시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④ O: 루소는 사회계약을 통해 결합한 국민 전체가 주권자가 된다고 보았다. 주권은 공동의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의지의 행사이므로 **다른 주체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주권을 넘겨받은 주인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정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NoteBase

문 12. 선거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선거구제는 대표 결정방식 중 다수 대표제와 결합하여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③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 인기가 높은 후보나 주요 정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

④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화될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기초의회 의원의 지역구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소선거구제로 묶은 설명은 잘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대표자 1명**을 선출하는 제도이다. 보통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당선시키는 다수 대표제와 결합한다.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여러 의석을 나누는 방식과 구별된다.

② X: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선거구마다 1명을 선출한다. 반면 기초의회 의원의 지역구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한다. 선지의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 기초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선거는 지역구 의원 선거와 별도로 구분한다.

③ O: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보다 선거구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이 적게 드는 편이다. 또한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당선**되므로 인지도가 높거나 주요 정당의 지지 기반을 확보한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 여러 명이 당선되는 선거에 비해 군소 정당 후보가 의석을 얻기는 어려운 편이다.

④ O: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당선되면 낙선 후보에게 던진 표는 의석 확보로 이어지지 않아 사표가 된다. 여러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긴 정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도 있으므로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 즉, 전체 유권자의 지지 비율이 의석 비율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1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나)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누구도 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닐 수 없고,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① (가)는 법치주의를 형식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② (나)는 법의 내용과 목적을 중시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③ (나)에 따르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④ 전체주의 국가는 (가)보다 (나)로 법치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전체주의 국가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 이용**하므로 (가)에 가깝다. (나)는 **통치자도 법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본다. 이는 법의 내용이 정의로운지보다 **법에 근거한 통치라는 형식**을 중시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률의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통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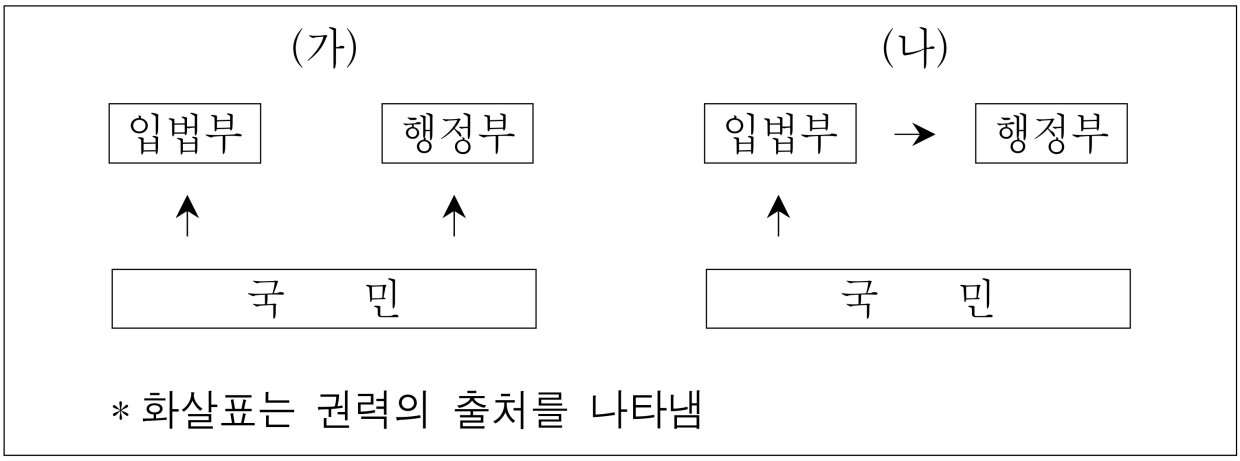
② O: (나)의 '법의 지배'는 통치자까지 법에 종속시켜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으려는 관점이다.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법에 근거하여 통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의 내용과 목적도 기본권 보장과 정의에 부합**해야 통치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③ O: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국가 의사 결정에 반영하고, (나)와 같은 법치주의는 권력 행사를 법으로 제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민주주의는 법의 제정과 권력 행사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법치주의는 다수의 결정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므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④ X: 전체주의 국가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관철하고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나)보다 (가)에 가깝다**. (나)는 통치자도 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관점이므로, 법을 권력자의 도구로 삼는 전체주의적 통치와 구별된다.

NoteBase

문 14. 그림은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를 단순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나)에 비해 권력분립이 엄격하지 않다.

② (가)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한다.

③ (나)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유기적 관계에 있다.

④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나)에 해당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나)는 국민 → 입법부 → 행정부로 권력의 출처가 이어지는 의원내각제이다. 의회의 신임을 바탕으로 내각이 구성·존속하므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그림의 화살표는 권력의 출처를 나타낸다. 국민에게서 입법부와 행정부로 화살표가 각각 향하는 (가)는 대통령제이다. 국민에게서 입법부로, 입법부에서 행정부로 화살표가 이어지는 (나)는 의원내각제이다.

① X: 대통령제인 (가)는 국민이 의회와 대통령을 각각 선출하므로 두 기관이 독립적인 정당성을 갖는다. 따라서 의원내각제인 (나)에 비해 **권력분립이 엄격하다**.

② X: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원내각제인 (나)**의 특징이다. 내각은 의회의 신임을 잃으면 총사퇴하거나 의회 해산을 통해 국민의 판단을 구한다. 대통령제인 (가)에서는 대통령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여 재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회가 행정부 불신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③ O: 의원내각제인 (나)에서는 일반적으로 의회 다수당이나 다수 연합을 바탕으로 내각이 구성되고, 내각은 의회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 이처럼 행정부의 구성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에 연결**되므로 입법부와 행정부는 유기적 관계에 있다.

④ X: 우리나라는 국민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각각 선출하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므로 (가)에 해당한다. 국무총리 제도 등 의원내각제 요소를 일부 두고 있지만, 의회가 구성한 내각이 행정권을 담당하는 (나)로 분류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5.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를 채택하고 있다.

②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과 일부 비상임이사국에게 거부권이 주어진다.

③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 유네스코와 인권이사회가 활동하고 있다.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서로 국적이 다른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국제연합은 평화를 위협하거나 침략하는 국가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집단안보**를 채택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제재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집단안보**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침략을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로 보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국제연합은 이 원리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며,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평화의 파괴·침략행위에 대응하여 경제적 제재나 군사적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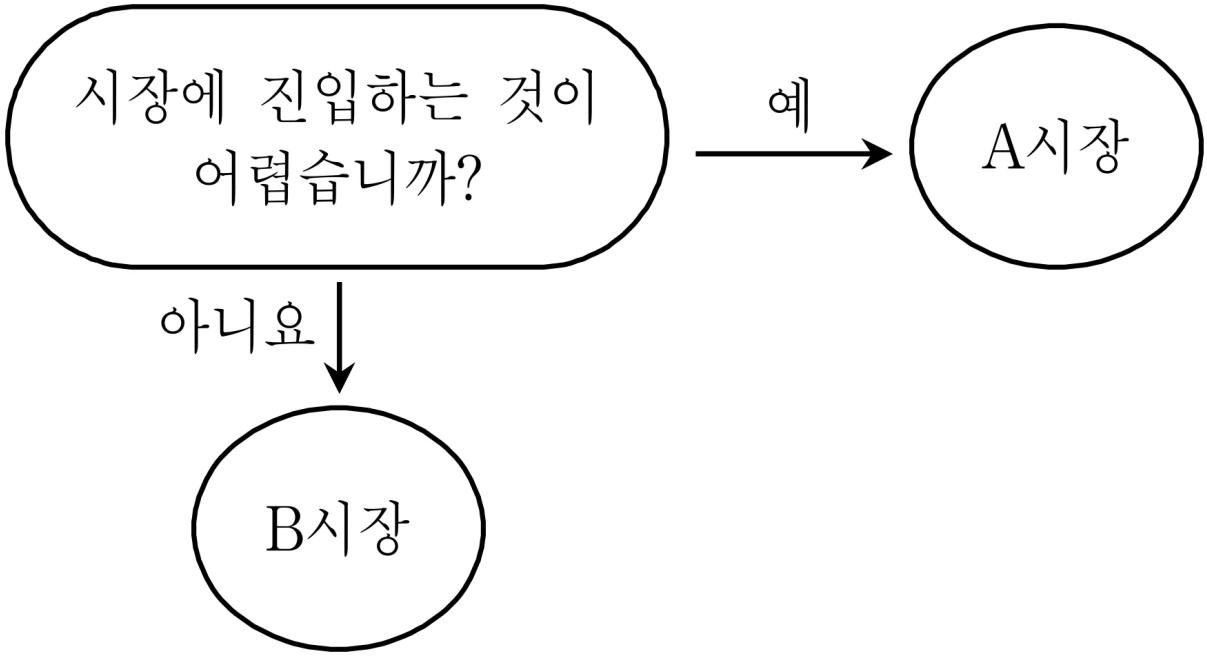
② X: 거부권은 **5개 상임이사국에만** 인정되며, 비상임이사국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상임이사국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이다. 유엔 헌장 제27조에 따른 거부권은 실질사항에 적용되며, 절차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X: 유네스코와 인권이사회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기관이 아니다. 유네스코는 교육·과학·문화 분야의 국제 협력을 담당하는 **유엔 전문기구**이고, 인권이사회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총회의 보조기관**이다.

④ X: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재판소는 9명이 아니라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동일한 국가의 국민이 2명 이상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서로 국적이 다르다는 설명은 맞지만 재판관 수가 잘못되었다.

NoteBase

문 16. 그림은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진입 가능성 여부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 것이다. A와 B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B시장보다 A시장이 높다.

ㄴ.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B시장보다 A시장이 낮다.

ㄷ. 기업 간 담합 발생 가능성은 A시장보다 B시장이 높다.

ㄹ. 시장 참여자가 가격수용자가 될 가능성은 A시장보다 B시장이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A시장은 진입 장벽으로 경쟁이 제한되어 **가격을 높이고 생산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B시장보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크다. 진입이 자유로운 B시장에서는 개별 시장 참여자가 시장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가 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그림에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에 '예'로 연결된 A는 진입 장벽이 있는 독점·과점 시장이고, '아니요'로 연결된 B는 진입이 자유로운 완전 경쟁 시장이다. 동질의 상품을 생산한다는 조건에 따라 상품 차별화가 있는 독점적 경쟁 시장과 구별한다.

ㄱ. O: A시장에서는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쟁 시장보다 가격을 높이고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생산·소비되지 못하는 거래가 생겨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B시장보다 크다.

ㄴ. X: 시장지배력은 기업이 가격이나 거래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다. A시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기존 기업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므로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B시장보다 **높다**. B시장의 개별 기업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인다.

ㄷ. X: 담합은 기업들이 경쟁을 줄이기 위해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합의하는 행위이다. A시장에 속하는 **과점 시장**에서는 소수 기업이 서로 합의하고 이를 유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반면 B시장에서는 기업 수가 많고 새로운 기업의 진입도 자유로워 담합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담합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쪽은 B가 아니라 A이다.

ㄹ. O: 가격수용자는 자신이 가격을 정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는 경제 주체이다. B시장에서는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하므로 개별 참여자가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가 **가격수용자가 될 가능성**은 A시장보다 B시장이 높다.

옳은 보기는 ㄱ, ㄹ이며, ②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7. 경기변동에 따른 경제안정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기과열 시 지급준비율을 인상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② 경기과열 시 세율을 인하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③ 경기침체 시 국공채를 매각하여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④ 경기침체 시 정부지출을 축소하여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경기과열기에는 총수요를 줄이는 긴축정책이 필요하다. **지급준비율 인상**은 은행의 대출 여력을 줄여 통화량과 소비·투자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예금 중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을 높이면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 통화량이 감소하고,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어 총수요가 감소한다. 따라서 지급준비율 인상은 경기과열을 억제하는 **긴축 통화정책**이다.

② X: 세율을 인하하면 가계가 세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인 처분가능소득이 늘어 소비와 총수요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경기과열 시 총수요를 줄이려면 **세율을 인상**하는 긴축 재정정책이 적절하다.

③ X: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하면 매수자가 지불한 대금이 중앙은행으로 흡수되어 시중 통화량이 감소하고 총수요도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경기침체 시 총수요를 늘리려면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하여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확대 통화정책이 적절하다.

④ X: 정부지출은 총수요의 구성 요소이므로 정부지출을 축소하면 총수요가 감소한다. 경기침체 시 총수요를 늘리려면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확대 재정정책이 적절하다.

NoteBase

문 18. 다음은 국제 수지 중 서비스 수지와 이전 소득 수지에 대한 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ㄱ~ㄹ 중 올바르게 기록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구분	외화 수취	외화 지급
서비스 수지	ㄱ. 외국인으로부터 벌어들인 관광 수입 10억 달러	ㄴ. 외국기업 주식 매입금액 9천만 달러
이전 소득 수지	ㄷ. 국내 투자자가 외국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받은 배당금 1억 달러	ㄹ. 정부가 해외 난민 보호를 위해 무상원조한 1억 달러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외국인에게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입은 **서비스 수지의 외화 수취**이다. 해외 난민을 위한 무상 원조는 반대급부 없이 외화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전 소득 수지의 외화 지급**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서비스 수지는 외국과 서비스를 거래하여 발생한 수취와 지급을 기록한다. 이전 소득 수지는 재화나 서비스 등의 반대급부 없이 주고받는 무상 원조·기부금 등을 기록한다.

ㄱ O: 외국인으로부터 벌어들인 관광 수입 10억 달러는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다. 따라서 **서비스 수지의 외화 수취**에 기록한 것이 적절하다.

ㄴ X: 외국기업 주식 매입금액 9천만 달러는 서비스 이용 대금이 아니라 **외국 금융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다. 외화가 지급되었다는 방향은 맞지만, 서비스 수지가 아니라 금융 계정에 기록해야 한다.

ㄷ X: 국내 투자자가 외국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받은 배당금 1억 달러는 무상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대가이다. 따라서 이전 소득 수지가 아니라 **소득 수지의 외화 수취**에 기록해야 한다.

ㄹ O: 정부가 해외 난민 보호를 위해 무상 원조한 1억 달러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의 **반대급부 없이 해외에 지급한 금액**이다. 따라서 이전 소득 수지의 외화 지급에 기록한 것이 적절하다.

올바르게 기록한 항목은 ㄱ과 ㄹ이며, 이는 ②의 조합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9. 다음은 A국, B국, C국의 고용에 관한 통계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구분	노동(생산)가능 인구(명)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A국	10,000	75	6
B국	12,000	60	7
C국	9,000	80	8

①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A국이 가장 많다.

② 경제활동인구 수는 B국이 가장 많다.

③ 취업자 수는 B국이 가장 많다.

④ 실업자 수는 C국이 가장 많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실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에 실업률을 곱해** 구한다. C국의 실업자는 576명으로, A국의 450명과 B국의 504명보다 많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인구이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노동 가능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고,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이다. 따라서 두 비율은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인구가 다르다.

경제활동인구 수는 노동 가능 인구 수에 경제활동 참가율을 곱해 구한다. A국은 $10,000 \times \frac{75}{100} = 7,500$명, B국은 $12,000 \times \frac{60}{100} = 7,200$명, C국은 $9,000 \times \frac{80}{100} = 7,200$명이다.

① X: 비경제활동인구는 노동 가능 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를 뺀 인구이다. A국은 10,000 − 7,500 = 2,500명, B국은 12,000 − 7,200 = 4,800명, C국은 9,000 − 7,200 = 1,800명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B국이 가장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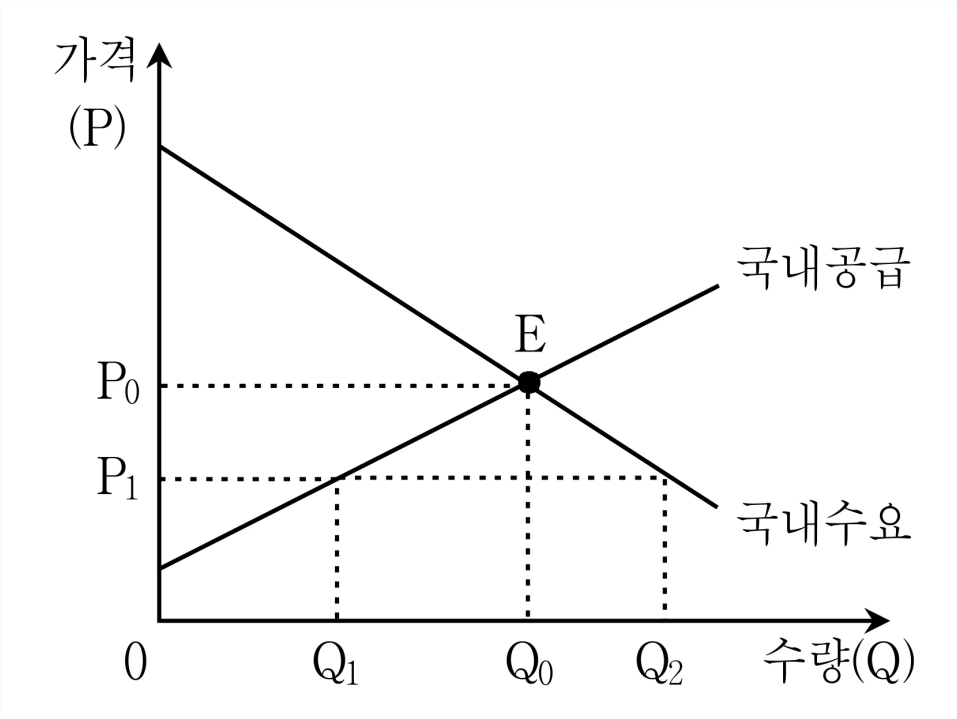
② X: 경제활동인구 수는 A국 7,500명, B국과 C국 각각 7,200명으로 **A국이 가장 많다**. B국은 노동 가능 인구가 가장 많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낮아 경제활동인구 수까지 가장 많은 것은 아니다.

③ X: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를 뺀 값이므로, 경제활동인구에 실업자가 아닌 사람의 비율을 곱한다. A국은 $7,500 \times \frac{94}{100} = 7,050$명, B국은 $7,200 \times \frac{93}{100} = 6,696$명, C국은 $7,200 \times \frac{92}{100} = 6,624$명이다. 취업자 수는 **A국이 가장 많다**.

④ O: 실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에 실업률을 곱해 구한다. A국은 $7,500 \times \frac{6}{100} = 450$명, B국은 $7,200 \times \frac{7}{100} = 504$명, C국은 $7,200 \times \frac{8}{100} = 576$명이다. 따라서 실업자 수는 **C국이 가장 많다**.

NoteBase

문 20. 그림은 A국의 X재에 대한 국내수요와 국내공급을 나타낸 것으로 자유무역을 실시하기 전 E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A국이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경우, 국내의 X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재의 국제 시장가격은 P_1이고, A국은 이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가격에서 X재를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다)



① 시장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②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③ 사회적 잉여는 감소한다.

④ 국내 생산자의 국내 판매수입은 감소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사회적 잉여는 감소한다'는 '증가한다'로 고쳐야 한다. 더 낮은 국제가격으로 수입하면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이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보다 커서**, 두 잉여의 합인 사회적 잉여가 증가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그림에서 개방 전 균형점 E의 가격과 거래량은 각각 P_0, Q_0이다. 국제가격 P_1은 P_0보다 낮다. 개방 후 P_1에서 국내 공급량은 Q_1, 국내 수요량은 Q_2가 되며, 그 차이인 $Q_2 - Q_1$만큼 수입한다.

① O: A국은 국제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 가격으로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으면 소비자가 수입품을 구매하므로, 시장균형 가격은 **국제가격 수준으로 하락**한다. 그림에서는 P_0에서 P_1로 낮아진다.

② O: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뺀 값으로, 그림에서는 수요곡선 아래와 가격선 위의 면적이다. 가격이 낮아지면 **기존 소비량을 더 싸게 구매**하고, 소비량도 Q_0에서 Q_2로 늘어나 추가 소비에서 잉여를 얻으므로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

③ X: 사회적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다.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받은 금액에서 생산물을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뺀 값으로, 그림에서는 가격선 아래와 공급곡선 위의 면적이다. 개방으로 국내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이 그 감소분보다 크다**. Q_1부터 Q_0까지는 국제가격보다 비용이 높은 국내 생산을 더 싼 수입으로 대체하여 이익을 얻는다. Q_0부터 Q_2까지는 소비자의 지불 용의가 국제가격보다 큰 추가 소비가 이루어져 이익을 얻는다. 이 두 이익만큼 사회적 잉여는 증가하므로, '감소한다'를 '증가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국내 생산자의 국내 판매수입은 **판매가격 × 국내 판매량**이다. 개방 후 판매가격은 P_0에서 P_1로, 국내 생산자의 판매량은 Q_0에서 Q_1로 모두 줄어든다. 따라서 국내 판매수입은 P_0Q_0에서 P_1Q_1로 감소한다.

NoteBase